

4

**인구 분야
미래전략
Population**

KAIST Future Strategy 2020

‘적응’의 관점으로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다. 출생 관련 수치는 연일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2019년 상반기 출생아 수는 158,524명으로 1년 전보다 7.7% 감소했으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정부들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저출산 대책을 펴왔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노무현 정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이명박 정부),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 및 맞춤형 돌봄 확대(박근혜 정부) 등을 표명했지만, 그 성과는 실패나 마찬가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며 ‘고용·주거·교육에 대한 구조개혁 방침’을 발표했고, 2018년 12월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을 대폭 수정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에 따르면, 2017~2018년 정부·지자체가 저출산 명목으로 쓴 돈은 6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책의 개입으로 결혼과 출산 흐름이 금세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절실하고 시급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우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노동력의 고령화로 노동 생산성도 낮아질 것이다. 고령 인구 증가는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을 높이게 된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저출산의 장기적 추세다. 국내 인구 변천이 자연 감소 단계로 들어서고 있고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30~34세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으며, 여기에 경제적 여건과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정책 개입을 통해 초저출산 현상의 구조적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극복’의 관점이 아니라 ‘적응’의 관점이 더 요구된다. 인구 구조와 관련한 정책의 시계를 보다 확장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을 일으키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 현황

한국은 급격한 인구 변천을 겪어왔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 붐 현상이 나타나고,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인구증가율은 거의 연평균 3% 수준에 육박했다. 1960년대 초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가족계획 사업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경제사회 발전과 더불어 정책의 효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다.

1960년 당시 6.0명에 이르렀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는 2.08명으로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낮아졌으며, 1998년에는 처음으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합계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2001년에 처음으로 1.3명까지, 2005년에는 1.08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다소 높아지다가, 2016년에 다시 1.17명으로 하락하고 2017년에는 1.05명, 2018년에는 0.98명으로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1.3명 이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35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생아 숫자로 봐도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1970년대에는 매년 90만 명 이상이 태어났고, 1980년대에는 80만 명, 1990년대에는 60만~70만 명이 태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더욱 급감하여, 2016년에는 406,300명이 태어났고, 2017년에는 357,700명, 2018년에는 326,900명이 태어났다. 머지않아 30만 명대도 무너질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현상은 필연적으로 인구 규모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6월 기준 약 5,171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7년에는 3,929만 명이 될 전망이다. 총인구 중 노인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2018년 14.3%를 지나 2025년 20%, 2051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7년 1.2%에서 2067년 13%로 예상되며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는 단계별 인구 전략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인구 구성 측면에 영향을 주지만, 결국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 부담을 촉발할 것이다. 따라서 인구학적 접근과 경제·사회·문화적 접근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력 부족과 그로 인한 내수 시장 위축, 경제 성장 둔화, 노동 계층의 사회보장 부담 증가, 사회 갈등 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들과 이행 전략을 살펴본다.

단기 전략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인구 전략은 출산력을 회복해 적정 인구나 안정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합계출산율(인구대체 수준)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존속하는 한(또는 미래에 로봇 등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필요한 노동력을 항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은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구대체 출산율인 합계출산율 2.1명으로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⁶¹

이러한 전략을 시도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50년까지 일본 인구를 1억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합계출산율 목표를 1.8명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높아진 사례는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전략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단기 전략이자, 장

거적으로 일정한 목표출산율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도 내포하고 있다.

중기 전략

중기적 관점에서의 인구 전략은 우리 사회가 보유한 유휴 잠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단기적 관점에서의 합계출산율 제고 전략이 미래에 요구되는 수준까지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보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2017년 기준 56.9%로, OECD 회원 33개국 가운데 27위다. 여성의 유휴 잠재 인력을 활용하는 전략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보충 전략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출산율 회복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전략은 고령자를 보다 오랫동안 노동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학력, 직무 능력, 건강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월등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다수가 노동 세대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이것이 청년 세대의 실업 상황과 맞물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일을 그만두기 시작하면 노동력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따라서 경제 활동 의지가 높은 미래 고령자 세대들을 노동 시장에 더 오래 남아 있게 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고령자들이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하지 않고 대신에 노동 활동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뿐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를 내

고,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장기 전략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민 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전략은 이민자 유입의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다른 조건들과 결부해 채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면 지금부터라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 정책은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래 출산율 회복 수준과 국내 유휴 잠재 인력 활용도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또 하나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통일 시대의 인구 예측과 인구 전략이다. 통일로 가는 과정 및 통일 한국에서 시기별, 단계별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전략을 지금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질’에 대한 관심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 및 통일 한국에서의 적정 인구에 대한 예측은 인구 전략의 기초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생 인구의 질을 높여 다방면으로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인구의 질은 인구의 규모 못지않게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1.5명까지 감소했던 합계출산율을 2018년

1.9명까지 끌어올린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는 ‘결혼’이라는 법적인 전통적 가족 제도를 넘어 이성·동성 커플들이 자유롭게 동거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파스(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연대계약)를 도입했고, 혼인 여부 구분 없이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800유로를 지급하는 등 대상에 대한 지원 제도 혜택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이미 국내에서도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법적 혼인으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인정하고, 다양한 육아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이슈들이다.

인구 전략 실행 방안

앞서 살펴본 단계별 인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적정 인구 혹은 안정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정 부담은 복지 차원의 비용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은 가정의, 보육은 국가가

- 지자체 중심의 공동체 돌봄 정책 설계
- 보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보육의 실질적 품질 제고
- 결혼·출산을 저해하는 만혼 현상의 사회환경적 문제 대폭 개선(결

혼 비용 및 주택 문제 등)

- 결혼과 연계한 청년층 대상 양질의 주거안정지원 정책 확대 및 현실화(장기임대 주택 등)
- 자녀 양육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비용 무료화 또는 최소화
-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다양한 아동수당 지급 방식 설계
-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 지원책

- 정책 대상자인 부모의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설계
- 유연근무제 등 비정형 근로 형태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
- 결혼, 출산 및 양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 파악 및 지원 확대
- 보육 지원 체계와 일-가정 양립 제도 간 연계 강화(정규 시간 외 아동 보육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 등)
- 가정-기업-국가의 삼각 연대 보육 지원 체계 강화
- 정규 교육과정 내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공감대 형성 노력
- 여성 육아휴직뿐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정상화 노력
-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 내 애로사항 해소 및 인센티브 강화(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방안

- 일-가정 양립 제도의 강화로 유자녀 여성 인력의 비자발적 이탈(경력단절) 방지
-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개인의 업무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기회 우선 제공(시간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무 형태)
- 직장 내 양성평등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 적극 시행
- 시간제 차별 해소 및 남녀 동등처우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국내 유휴 잠재 인력 활용

- 여성들과 고령자들의 노동 시장 진출을 돕는 사회문화 조성
- 기간제와 통상근로자 전환 제도, 안정된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 고령 인력 확대를 위해 기업의 연공서열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
- 민관협력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을 발굴하여 관련 산업 잠재 인력과 매칭
- 청년-고령자 세대 간 공생 발전 여건 조성
- 시간제 근로 전환 지원 등 점진적 퇴직 활성화
- 퇴직(예정) 근로자에 대한 전직 교육 강화 및 공공 전직 지원 서비스 활성화
- 개별 경력을 고려한 직업 훈련, 재교육, 사회 기여 및 재능 나눔 활성화

해외동포 등을 포함한 외국인 인력 활용

- 미래의 노동력 부족량에 연동하여 방문 취업 체류 기간 연장
- 외국인 인력 활용은 필요인력 충원과 우수 인재 유치라는 이중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사회 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초고령사회

—————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다른 국가의 추세를 보면, 미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73년이 걸렸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21년이 소요되었다. 대표적인 고령 국가인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기까지 24년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12년이 소요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17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인다.

고령화사회의 현황과 의미

고령화는 생활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갖는 현상이자 사회 운용 패

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 다른 나라들과 같이 10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면, 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서서히 적응하고 변모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 2018년 우리나라 노인의 49.6%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를 차지했고,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고령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지 못해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에 2050년 노인 인구 비율이 38% 가까이 되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가령,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그러하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67년에 이르면 1,784만 명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⁶²

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국가 재정 부족 문제와도 연결된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추어 의료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지출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근로 인구가 감소하면 세입 기반이 위축되어 국가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가하게 되고, 세대 간 갈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고령사회 대응 전략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고령자’ 개개인이 갖는 삶의 애로사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령사회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의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즉,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사회 문제들은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연령주의로 인한 고령자 배제, 고령자 재교육의 부재로 인한 노동력의 질 저하, 교통 인프라 낙후성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등이다. 두 번째는, 사회 변화 과정에서 고령 인구의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⁶³ 생산 시스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자의 빈곤, 디지털 사회에서 고령자의 사회 활동 능력 저하, 전통적 가족 붕괴로 인한 돌봄의 약화,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위험 등이다.

이 두 가지 방향의 대안들이 실효를 거둔다면, 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직면하는 ‘노후 4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와 같은 문제들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고령화에 따른 사회 구조 개선이 잘 이루어져 새로운 기회와 발전적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가치로 화두가 이동할 것이다. 가령 현재와 비교했을 때 고령사회에서는 건강, 여가, 배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년에 대한 준비도가 높아진다면 노인들은 새로운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춰 고령사회형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실버문화 콘텐츠 개발자, 노후 설계 상담사 등 지금까지 부각되지 못했거

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직업들이 그러한 예다.

단기 전략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노후 소득과 고용 영역의 기초적인 사회 토대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노인 자살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경제적인 안정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여가, 삶의 질 등 노후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노후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안정된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연금 수급 이전까지 안정된 경제 활동을 보장하도록 중고령자 고용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개인 차원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2018년 39.3%인데 이는 OECD 평균 47.3%보다 낮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36.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 국가들도 한때는 연금 소득대체율이 80~90%에 달했으며, 소득을 비롯한 제반 복지 여건이 튼튼하게 갖춰진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낮춘 것이다. 아직도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안정된 고령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연금의 높은 소득대체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마련해왔으나 포괄하는 대상층이 낮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0세 정년을 법제화하고 2016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법정 정년제가 제대로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어 소득 공백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고령자들이 퇴직에 가까워진 나이에 더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기 전략

중기적 차원에서는 ‘복지’에서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즉, 고령화를 부담에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령화를 적극적인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령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향후 ‘노년 서비스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고령자 적합형 주택 시장, 금융 시장, 여행 상품, 여가 관련 시장 등이 경제력을 갖춘 새로운 노인 세대의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지 차원에서는 그동안 확립된 복지 정책을 정비하는 작업이 중기 과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노인과 관련된 복지 정책 및 인프라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는데, 이처럼 급속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중첩되거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중기적 과제로 노인 복지 분야의 공공 인프라 기능과 역할을 종합해 새롭게 재편성하는 체계 개편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장기 전략

장기적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의 조정과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영역은 교육이다. 현재 노년 교육은 복지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과연 고령사회 생애주기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인지에 관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의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또 다른 영역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다. 가족의 형태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의 형태로 변해왔는데, 고령사회의 진전과 함께 1인 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별 등의 이유로 노인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족 형태가 보편화되면 가족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대안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범사회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한다. 핀란드는 일종의 ‘노인 공동체’인 코티사타마^{kotisatama}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복지 비용을 절감시키고 지속 가능한 노인 보호 대책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또 프랑스에는 큰 집에 홀로 사는 노인과 가족을 연결해주는 기관이 있다. 홀로 사는 노인과 청년이 한집에 살거나, 홀로 사는 노인들과 또 다른 가족들이 한공간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이루며 살아간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은 특별한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는 노인과 고령화에 특화된 대책들이 필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모든 연령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관한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의 연령 기준 변경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단기적 실행 방안

- 노령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노후의 경제적 안정화에 초점
-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농지 연금 활성화
- 1인 1국민연금 체제 확립
- 기초 연금 내실화를 비롯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 상향 조정 논의 필요
- 공적연금 이외의 다양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 상품 개발
-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년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등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지원 인프라 확충

중기적 실행 방안

- 정부 차원의 실버 산업 지원 체계 강화
- 교통, 관광, 식품 산업 등 현존하고 있는 시장 가운데 노인의 일상 생활에 밀착되어 있지만 노인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보이는 시장 영역 중심으로 발전 모색
- 기술 활용을 통한 지역 사회 내 노인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장기적 실행 방안

- 민관협력 고령화 연구 센터 구축,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연구 및 정책 개발 강화
- 은퇴 이후 인생 재설계 컨설팅, 직무 훈련,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전환기 노인을 위한 교육 재설계 및 교육 접근성 제고

-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생애 전체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 재구조화
- 가족을 대체하는 공적지원 체계 구축 및 1인 가구를 위한 각종 법 제도 정비
- 실버협동주택 등 비혈연 가구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 지원 정책 강구

100년을 설계하는 미래 세대 전략

—————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미래 세대란, 현세대의 결정과 행동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도 아직 미성년이거나 태어나지 않았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없는 세대를 말한다. 이는 곧 현세대의 의사결정이 미래 세대까지 포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미래 세대를 향한 관심과 투자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자원 활용과 환경 정책 등은 미래 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요인들이다. 또 문명사적 전환에 비유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정책과 사회적 수용 방식은 어떤 측면에서는 현세대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정점을 살아갈 미래 세대의 이슈일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이슈의 경우에는 미래 세대를 함께 배려하는 관심과 정책을 더 필요로 한다.

청년층의 자조적인 미래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고 말했다. 세계적 투자자로 알려진 짐 로저스는 2017년 KBS <명견만리>에 출연하여 “나는 20년 전 한국의 외환위기 시절에 한국에 투자하여 크게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서울의 노량진에 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이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며,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혼 기피, 저출산, 자살률 등 여러 가지 국가적 의제들이 이러한 현상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느냐 하는 것이다.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미래 세대에 대한 무관심은 현재의 정치적, 제도적,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의 공식적인 제도는 현세대의 요구에 우선 대응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통치 행위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하지만 환경 오염과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 변화 그리고 자원 고갈 등 현세대가 남긴 폐해를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데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고, 이러한 의식들이 미미하게나마 미래 세대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이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이 되면서 미래를 향한 관심과 우려가 촉발

되고 있다.

환경 및 자원 보존과 미래 세대

환경 및 자원 보존과 관련한 논의는 미래 세대의 '환경권'과 직결된다. 지구의 환경과 자원은 현세대의 소유물이 아니며, 미래 세대도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천연자원의 혜택을 누리고 살 권리를 갖는다. 현세대가 지금과 같이 자원 소비를 지속한다면 지구의 유한한 자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으며,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 또한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기후는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자연 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에너지 사용도 문제가 될 것이다.

세대 간 자원 분배 문제

세대 간 자원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현행 연금 제도다. 세대 간 부양의 원리에 기반을 둔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인구 구조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연금 지출은 늘어나지만, 출산율 저하와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연금 재원은 오히려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미래 세대에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 등의 연금 제도가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미래에도 지속이 된다면 결국 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재정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의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예측되는 사회 문제들 속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한편 고령화의 진전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복지 수요는 지속하여 증가할 전망이다. 현행 복지 제도를 유지만 하더라도 2050년에는 사회 복지 지출이 GDP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현세대를 위해 복지를 확대할 경우 이는 곧 미래 세대의 복지를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

한 해의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재정 적자가 만성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2008년 이후 대규모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국가의 빚은 미래 세대에 막중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적 제안 사례

미래 세대와 현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적인 제안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헌법 개정부터 입법부 내 위원회, 독립적 행정기관, 정책 의제 설정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 사이클의 모든 단계를 취급한다. 또 국외와 국내, 지방의 개혁 사항까지 포함한 공공정책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 및 비영리 부문을 포함한 인간 행동의 다양한 부분까지 포괄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래 세대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 기존에 제시된 여러 해결책을 분석해보면, 상당수가 복합적인 목표를 지녔으

| 표 8 | 미래 세대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해결책 제안

1.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 개혁
2. 미래 세대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조항 마련 또는 강화
3. 미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선출직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에 양도
4. 선거 제도 및 투표권 개혁
5. 행정 및 입법기관의 설계 변경
6. 미래 예측 메커니즘과 계획 프로세스 강화
7. 장기적인 사안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전략과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자문 기관 설치
8. 미래 세대의 후견, 또는 보호와 책임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 창설
9. 절차 및 실질적인 부문에서 의사결정자들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도입
10. 예산·성과 관리 기구 및 책임성 강화
11.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회계·복지 측정을 위한 미래 준비 및 영향지수 개발
12. 시민사회 역량 강화

며, 단순히 미래 세대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또 제안의 중요도나 복잡성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 개별 국가들의 헌법 규정, 정부 조직, 정당 간 경쟁 구조, 이념적인 양극화 수준, 사회적 신뢰와 호혜성 수준, 정책 프로그램의 특성, 정책 해결책과 연관된 보상 구조 등이 다양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설계의 원칙

미래 세대의 권익 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또 많은 정치적, 제도적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장기적

인 계획과 지속적인 실천이 필수적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들은 무엇보다 실행할 수 있고, 효과가 있어야 하며, 한국의 상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원칙으로 실행 가능성, 정책적 효과성, 한국적 적실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략적 실행 환경 제공

- 정책결정자들이 단기 이익을 넘어 중장기 미래에 관심을 가지도록 인센티브 제공
-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 방법 및 절차 제공
- 국회 내 입법·정책에 대한 영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중장기 효과성 평가 및 부작용 최소화

제도적 장치를 통한 실행 방안

- 정부 예산 편성 시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미래 세대인지예산제 추진
- 국가 정책 의사결정 구조 내 미래 세대 대리인, 청년 참여 비율 확보
- 미래 세대 배려 정책을 수립하도록 적절한 정치적 보상 구조 마련
- 중장기 미래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입안 시 가산점 부여 등 공무원 평가 제도 개편
- 미래 세대를 위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의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제도 마련
- 미래 세대 대리인 선출, 즉 비례대표제를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제

도로 보완

-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특정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 모색

미래 세대에 희망 불어넣기

- 교육 사다리 회복: 공교육 정상화, 다양한 진로교육, 학력차별 금지, IT 기술을 활용한 교실 내 교육 환경 개선, 사교육 근절 등
- 사업 사다리 회복: 성실성과 기술만 가지면 사업을 펼치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구축. 창업 지원 정책, 창업자 연대보증 금지, 실패 용인, 패자부활 등
- 신뢰 사다리 회복: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 회복 프로세스 구축

국가 발전과 선순환하는 다문화사회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4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발전과 선순환하는 다문화사회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랫동안 정서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바뀌고 있다.

변화의 직접적 원인은 이민자의 유입이다. 1980년대 후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으로 시작된 이민 흐름은 1990년대 초에는 결혼이민으로, 2000년 대에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이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3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과거에는 이민자의 거의 전원이 중국과 일본 등 이웃나라에서 왔지만, 1980년대 말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의 출신국은 중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 및 중앙아시아, 유럽 각국과 북미, 중남미 등 다양하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들의 정착 또한 변화의 한 축을 이룬다. 국적,

민족, 종족, 인종이 다른 사람들 간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국내 전체 결혼 건수의 13.6%인 42,356건이 국제결혼이었다. 이후 2016년(20,591건)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 20,835건, 2018년 22,698건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결혼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보다는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경제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하며 한국 문화에 자신들의 문화를 녹아들게 한다. 다른 문화권의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은 인구 결손을 보충하거나 경제적 이해뿐만 아니라 문화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인구 고령화와 이민 수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라 이민자 유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전망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18년 5,161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성장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67년에는 3,92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2067년 1,784만 명, 총인구의 45.4%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다. 전체 인구보다 노동력이 먼저 감소하는 것이다.

현재의 출생률과 사망률을 고려할 때,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몇 년 안에 반전시키기는 매우 어려우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인구 구조조정 시간을 벌기 위해 생산 가능 인구 중 여성과 이민자 노동력을 수용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 이민 정책의 방향

이민 정책을 통해 교육과 기술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민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부는 장기적 그림을 그리고 능동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첫 과제는 이민 정책 설계와 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외국인과 더불어 해외 거주 한인과 관련 가족의 국내 유입을 고려해야 하며, 한국의 국적법을 수정해 국내 이주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북한 거주민들을 수용할 정책을 병행하여 입안할 필요가 있다.

두뇌 유출 방지 대책 필요

정부는 ‘나가는 이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청년층과 전문 기술직 종사자의 해외 취업은 언제든지 정주형 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인재를 잃어버리고 인구가 감소한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으로 해외 인재와 기업가를 한국으로 유치하지 않는다면, ‘두뇌 유출’에서 ‘두뇌 순환’으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인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되 두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다각적 이민 정책 추진

다음으로 ‘들어오는 이민’이 국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정책 논의의 초점을 이민자의 숙련도와 국내 노동 시장 상황에 맞춰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정해야 한다. 저숙련 이주 노동자와 전문 기술 인력 및 결혼 이민자 등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

이민자 유입은 내수 시장을 확대한다. 이민자들은 소비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 이민자들의 낮은 인건비가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키면 내국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자의 노동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아 이민자에 대한 공격 이전 지출이 증가할 경우 1인당 GDP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민자들은 보통 가족을 동반하므로 국가는 이민자 가족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 은퇴 후에도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므로, 늘어난 기대 수명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민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며 유입국 사회에 기여한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을 사회보장비로 지출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 이민자들이 대부분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사회 기여도는 더욱 낮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 이민자 유입 효과를 누리려면 이주 노동자와 같은 ‘교체 순환형’과 영구 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을 병행해야 한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 정책

이민 정책은 우수 인력 확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흔히 기업의 미래는 우수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 말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내부 인력을 우수 인력으로 잘 길러내는 것 못지않게 외국에서 우수 인력을 유치해오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런 방법은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활발하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을 받아들인다면,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머리 좋은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전략이다.

일본도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2022년까지 2만 명의 우수 외국인

력을 활용한다는 정책을 제시하며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에 혁신을 일으키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재 포인트’ 제도를 통해 외국의 우수 인력 상황(경력, 학력, 연봉 등)에 따라 출입국 관리상 우대 조치를 받게 하거나, ‘인재 전문직’ 제도를 통해 무제한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현재 한국에 살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학오고, 대학 졸업 후에는 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 대학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받는 유학생에게는 비교적 쉽게 시민권을 준다면, 선순환의 유학 이민 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이민자 유입에 따른 자원과 대처

정주형 이민자의 경우 사회 통합 정책을 통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공정하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시민권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이민자 유입으로 초래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정주형 이민자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 및 실업, 주택, 취학 인구, 범죄, 문화와 공동체 해체, 복지 지출, 공공서비스, 공공재정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 수가 많아지면서 이민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 집단을 형성한다. 이들 중 일부는 개방적 정체성을 갖고 주류 사회 속으로 편입되지만, 다른 일부는 순수성과 배타성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공동체에 폐쇄적으로 정착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공동체나 민족 또는 종교 안에서

출신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간직한 ‘문화적 게토’를 형성하게 된다. 문화적 게토가 주류 사회의 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갈등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특히,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게토는 사회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민자 유입의 부정적 측면을 진단하고 그것을 예방해야 한다. 인종적, 종족적 다양성을 문화적 다양성으로 승화시키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사회 통합에 실패할 경우, 이민자와 내국인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성공적인 사회 통합

사회의 종족적 다양성을 문화적 다양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와 한국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상생하려면 이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또는 이민자에게 사회 적응은 힘든 경험이다. 낯선 언어와 문화, 관습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해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마찰과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인은 외국인과 외국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 정부 차원의 다문화사회 지원

- 사회관계망 구축을 통해 외국인이 지역 주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
- 지역 내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지역 주민이 어울려 지내도록 지역 공동체 사업 개발
- 다문화 감수성 교육 등 정서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가칭 ‘다문화주의 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활동 지원
- 외국인 이주민들의 관점에서 문화적 수요 파악
- 외국인 업무 전담 부서 설립
- 외국인 주민 대표가 ‘외국인대표자회의’를 통해 지방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 부여
- 이주자 밀집 지역과 지역 주민 소통을 돕는 지역 특화 공동체 행사 활성화

다문화 수용에 걸맞은 기업문화 조성 및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 외국인 노동자 차별 금지를 위한 상호감시 운동 운영
- 종교, 음식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전통문화와 생활관습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조성
- 생산직 외국인 노동자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 근절 방안 강화
-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보완 및 절차 간소화

시민사회 차원의 상생 프로그램 활성화

-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차별 방지 문화 조성

- 가칭 ‘친구 맺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화합의 기회 확대
- 똑같은 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세계 시민 의식 교육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내 지원 대상과 범위 개선
- 국제결혼 이주민 실태 파악 및 인권 보호 장치 마련
- 국제결혼 이주민들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해법 마련
- 아동기, 청소년기 이민자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아동기 기초학력 보장 교육, 중도입국 자녀 대상의 언어 교육 지원 등)
-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족 2세들의 특성에 맞춘 심리 상담 및 진로 탐색 지원

인간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 기술의 발전이 막을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면, 그 흐름의 중심에 인간이 서야 한다. 인간과 기계가 교감하며, 기계가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의 성공 여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달렸다.

과학 기술의 가속적 발전은 인류 역사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번영을 가져와 인류를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으로 찬양받았다. 실제로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일어난 1차 산업혁명, 전기가 촉발한 2차 산업혁명은 경제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20세기 후반 출현한 디지털 기술은 정보화혁명, 즉 3차 산업혁명을 촉발하고 최근 새로운 변곡점에 도달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논의의 출발점도, 종착점도 사람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낙원을 향한 꿈

4차 산업혁명은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동화·지능화된 생산 체제로 산업·경제·사회 구조를 급격히 바꾼다. 인간과 인간의 소통 기술로 실현되는 ICT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적 번영

정보 기술은 이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 스며들어, 만물의 소통과 조작을 실현하는 만물인터넷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만물인터넷은 사람, 기계, 설비, 물류, 제품 등 모든 것이 직접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지능형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가는 미래에는 기계들이 지능화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진화한다. 반면 기계를 지능화하는 데 필수적인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생산 비용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능화된 기계의 전면적이고 급속한 도입은 생산 부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경영 관리에서도 딥러닝 그리고 딥디시전의 방식으로 지능화된 인공지능이 급속히 도입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인간 조직이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지체, 경직화로 인한 관료화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것이다. 또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오류가 감소하고 운영 속도는 민첩해질 것이다. 이렇게 경제 전반이 지능화되면, 이는 더욱 큰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죽지 않는 인간의 도래, 포스트 휴먼 시대

만약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된다면, 포스트 휴먼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포스트 휴먼은 소위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불리는 미래주의자들이 미래에 출현할 것으로 예견하는 새로운 존재를 말한다. 이제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인간 유전자를 원하는 형태로 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진 배아를 만드는 기술 또한 완성되었다. 자식에게 유전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는 기존의 윤리 규범과 충돌하고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의 힘으로 기능이 증감된 인간이 바로 포스트 휴먼이다. 인간 이후 존재자가 출현하면, 인간의 생물학적 몸은 도태될 것이지만 이것은 불행한 사건만은 아니다. 기술을 통해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누가 지휘하는가?

혁명은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변혁하겠다는 역사 주체로서의 인간 선언이다. 근대 이후 인간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혁명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도 그러한가? 만일 과학 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예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혁명은 인간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지도 모른다.

할 일이 사라진 미래

4차 산업혁명이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된다면, 상당수의 인간이 미래에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물론 낙관적 전망도 있다. 기술 혁신이 한편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는 이전의 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 새로운 기술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사라지는 일자리 수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일례를 들면, 1990년대 초 제조업 경제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은 14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고용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실리콘 벨리에 고용된 인원은 14만 명에 불과하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로부터 인간을 해방,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지식 자본가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한 물질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소위 슈퍼리치 경제가 출현할 수도 있다. 이들 슈퍼리치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다양화된 욕망을 충족하는 데 소비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출현을 촉진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인공지능 개발에는 인간이 서로에 대해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인공지능 로봇이나 가상현실로 대체하려는 목적이 있다. 백화점 안내, 노인 간호, 심지어 섹스까지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미래가 오고 있다. 인공지능학자 데이비드 레비가 주도하는 ‘섹스 위드 로봇^{sex with robot}’ 프로젝트가 이를 증언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완성기에 도달한다면, 인간은 어떤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

으며,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미래에는 나라는 인간도, 너라는 인간도, 그들이라는 인간들도 모두 필요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요컨대, 인간이 더 할 일이 없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빈곤

일이 없는 미래에 가장 먼저 예상되는 사태는 일이 없는 자들의 빈곤이다. 그리고 빈곤이 만연할 경우, 시장에서 소비자가 사라져 결국 총수요 부족이라는 경제적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래의 포스트 휴먼, 일이 없는 자들에게 기본임금을 주는 정책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인간은 로봇에게 일을 위임하고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로봇세를 징수하여, 이것으로 기본소득을 충당하는, 노동 없는 시대를 예고하기도 한다. 인간이 일로부터 해방되고 낙원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간과 일의 관계에 대한 지극히 단선적인 사고다. 물론 기본소득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궁핍과 사회의 양극화 그리고 총수요 부족을 진정시키며, 사회의 기초 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일이 없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인간에게 일이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이를 구하는 동물의 행동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권태와 중독

기존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은 생산 요소와 비용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성찰해보면, 일은 인간의 품격, 개인의 사

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존적 처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없는 상태는 인간의 실존적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철학적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은 인간의 삶이 병리적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다. 일이 없는 자들에게 경제적 궁핍보다 더 위험한 사태는 이들이 권태에 빠져 결국 중독자로 전락하는 경우다.

중독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바이러스나 물질적 궁핍이 원인인 병이 아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발생하는,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시간적 질병이다. 인간은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미래라는 시간과의 관계가 절연된 상황, 즉 절망적 상황에 놓인다. 미래와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현재의 시간이 미래로 흐르지 않는 권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무리 물질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좋은 조건이 제공된다고 해도,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고 그 기획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면 절망과 권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컴퓨터 게임 중독이다. 게임 중독은 게임을 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발병하는 증상이 아니다. 프로게이머는 게임중독자가 아니다. 프로게이머는 컴퓨터 게임을 일로 함으로써 미래로 향한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다른 가능성을 향하는 길을 잃은 자들에게는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오직 현재만 있을 뿐 시간이 흐르지 않고, 따라서 떨쳐버릴 수 없는 권태에 빠지는 것이다. 이 권태를 일시적으로 망각하는 수단이 오직 컴퓨터 게임이라면, 그는 컴퓨터 게임 중독자다.

이렇듯 인간의 일, 시간성 그리고 중독 현상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아무리 자율적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일을 박탈한다면, 인간을 권태에 빠뜨린다면 그러한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국 붕괴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인도적 전환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이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인간의 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이를 구하는 동물의 행동과는 다른 차원의 주권적인 처신이다. 인간만이 미래의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 일을 한다. 기계는 작동할 뿐, 일하지 않는다. 인간이 일하기 때문에 기계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인간은 맨몸으로만 살 수 없다는 점이다. 삶을 몸으로 살아내는 인간은 항상 도구와 기술에 의탁하며 살아간다. 기술과 함께 일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생동적이게 된다.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때 몸은 도구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도구와 기술이 몸을 장식물로 전락시켜 삶에서 몸이 사라진다면 그 몸과 함께 결국 삶도 죽어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시 4차 산업혁명과 연관시켜보자.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적 기술의 발전이 전 산업에 매끄럽게 스며들어 산업 설비,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경제가 지능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이다. 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은 IoT를 기반으로 모든 것에 스며드는 인공지능, 즉 AoE(AI of Everything)다. 그러나 만일 AoE가 미래를 주도한다면 그 미래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일을 빼앗고 미래라는 시간을 증발시키며 결국 인간을 중독의 상태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 인간의 삶에서 미래와 자율적 주권을 박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눈여겨볼 가치가 있는 기술이 ‘적응형 자동화’다. 적응형 자동화는 인간을 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인간 친화적인 방식으로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미래로 가는 도정에서 과학 기술 발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 기술이 인간을 천국으로 이끄는 구원의 신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가치의 문제 숙고

-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성 인식 필요. 선용과 악용 가능성 모두 존재
- 과학 기술은 민주주의 발전에서 선용되기도 했지만, 제국주의의 팽창에 악용되었으며, 나치의 인종주의를 정당화하고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데도 악용된 바 있음
- 과학 기술 발전과 함께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과학 기술 선용을 위한 신뢰의 사회적 자본 확충

-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에 대한 국가적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 필요
- 4차 산업혁명은 시장 자본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사회적 정의, 신뢰, 상호인정과 존중 등의 사회적 자본 확충이 매우 중요
-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협력 필요

성찰적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기획의 혁신

- 보다 가치 있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단계에서 발상의 전환 필요

-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으로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어 시장 자분을 축적하고, 그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후순위의 부수적 과제로 생각하는 식의 기존 정책 기획 방식 개선 필요
- 과학 기술 선용을 위한 법과 제도적 방안 구축